

#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 대화국면... '한반도의 봄 시즌 2'



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을 12일 서울에서 열자"라고 북한에 제의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이날 류 장관의 발표에 앞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 발표를 전하고 있다.

## ■ 북한 포괄적 회담 제의 배경은?

### MB정부 5년 갈등 한꺼번에 풀기

북한이 6일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전격 제의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해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자고 제안하면서 꼬일 대로 꼬였던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급전환될 전망이다.

이런 북한의 대화 제의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최근까지 강경한 대남기조를 유지해온 점에 비춰볼 때 전격적 행보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대화 제의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5년간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풀아보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개성공단 정상화뿐 아니라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을 대화 의제로 내세웠고, 7·4 공동성명 발표 41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열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뒤 남북관계가 계속 꼬여왔기 때문에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복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합의된 7·4공동성명 발표를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제안해 박근혜 정부를 배려하는 모양새까지 보였다.

북한의 유화적 태도는 최근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중국 방문과도 연결된다. 이번 대화 제의는 최 총정치국장이 지난달 22~2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관련국과 대화의사를 표명할 때 따른 후속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남북 대화를 제의함으로써 시간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국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의 장군으로서 미국과 협의를 거쳐 6자회담의 복원을 시도할 공산이 적지 않다.

아울러 북한의 대화 제의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난 극복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올해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의 자율권을 확대를 비롯한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추진해왔다. 또 원산을 세계적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 속에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독려하고 지난달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는 등 경제특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한, 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정책은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 개성공단 정상화

#### 중단 65일만에 해결 실마리 정상화까지는 시간 걸릴 듯

북한이 6일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전격 제의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해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자고 제안하면서 꼬일 대로 꼬였던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급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현안문제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정상화되나=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촉발된 개성공단 사태는 북한 측의 근로자 철수 조치(4월 9일), 우리 인원의 전원귀환 완료(5월 3일)로 이어지는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잠정 폐쇄됐다.

북한이 이번 제안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의제로 못박고 나온 만큼 당국 간 회담이 시작되면 정상화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의 제의는 당국 간 대화를 정상화하고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노선 전환으로 봐야 한다"면서 대화가 시작되면 금강산과 개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북한이 단절된 통신선 개통 의사를 명확히 한 것도 개성공단 사태 해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민간인 방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통신선 개 통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당국 간 회담 논의는 장마철을 앞두고 입수업체 설비 등이 녹슬게 돼 공단이 완전폐쇄의 길로 들어서기 직전에 극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신중론도 존재한다. 북한이 제의한 포괄적 의제를 우리 정부가 전면 수용할지를 지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사태의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 등과 맞물려 정상화에 합의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강산관광길 5년만에 다시 열릴까=김대중 정부 시절인

### 금강산 관광 재개

#### 북한 관광재개에 적극적 특구법이 걸림돌 될수도

1998년 11월18일 배길을 통해 처음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11일 관광객 박왕자씨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현재까지 5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9년 8월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등에 대해 구두로 '약속'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당국 간 보장'이 아니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남북 양측은 2010년 2월 개성에서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정부가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를 제시했고 북한은 합의서 초안을 통해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처럼 자신들의 노력에도 금강산 관광 재개가 요원해졌다고 판단한 북한은 2010년 3월 금강산에 있는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4월에는 정부 자산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와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과 온천장, 면세점, 현대아산과 협력업체의 부동산을 동결·몰수하고 관리인원을 추방했다.

2011년에 들어서서 북한은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4월에는 현대와 기존에 합의했던 금강산 관광의 독점권 효력을 취소한다고 발표했고, 6월에는 남한을 포함한 외국에서 금강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특구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생각대로 금강산 국제관광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북한이 이번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남북 당국간 대화 의제에 포함하는 것은 남측에서 관광객이 올라가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이산가족 상봉

#### 남북간 합의 가능성 높아 올 추석연휴 성사 될수도

따라서 북한이 관광 재개에 적극성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당국간 회담의 결과에 따라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은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이 독자적인 국제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특구법이 금강산 관광 재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산가족 상봉 3년만에 재개 전망=추석 가능성=북한이 6일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안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3년 가까이 막혔던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가장 최근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0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금강산에서 열렸다.

당국간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할 경우 올 가을 추석연휴를 계기로 만남이 성사될 공산이 크다. 생존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상봉은 정치색이 적은 인도적인 문제여서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제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북한이 내밀었을 때 우리가 안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당국간 회담 이후 상봉 행사가 본격적으로 준비된다면 남북 적십자 회담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남측에서 신청한 이산가족 숫자는 12만8808명이다.

이 중 90세(9.4%), 80~89세(40.6%), 70~79세(30.5%) 등 70세 이상 고령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신청자 중 사망자 비율은 90세 이상이 47.4%, 80~89세가 40.6%를 차지해 상당수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 빛의만평

- 김중두



올해 '불관위의 대한민국'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 자동차 폐차는 반드시

## 「등록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무등록 폐차 대행업체나 견인 기사(브로커)를 믿고 폐차 의뢰했다가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자동차세체납 및 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등록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폐차를 요청하시면 견인부터 말소 등록까지 무료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해 드릴뿐만 아니라 고철가격도 드립니다.

이제 폐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안심하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를 찾으시려면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www.kadra.or.kr)또는 전화(062-527-7781)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 폐차가격 지급액

자동차 종류	차량중량(kg)	고철단가(원)	폐차가격(원)
경형승용차(1,300CC미만)	710	280	250,000
소형승용차(1,500CC미만)	971	280	350,000
중형승용차(2,000CC미만)	1,140	280	400,000
대형승용차(2,000CC이상)	1,280	280	450,000

- 가격산출근거 : 폐기물을 제외한 차량중량의 현재 고철단가 적용
- 2002년식 이전 노후 차량의 기본가격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무등록 불법업체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광주전남지부 문의전화 062)527-7781